

국가신용도 평가리포트

중국








People's Republic of China

2021년 6월 18일 | 책임조사역(G3) 이주은

- 국가개황
- 경제동향
- 경제구조 및 정책
- 정치·사회 안정
- 국제신인도
- 종합의견



일반개황

면적 9,597천 km ² 	인구 14억명 (2020 ^e) 	정치체제 사회주의 인민공화제 	대외정책 전방위 실리 외교 
GDP 14조 7,228억 달러(2020 ^e) 	1인당GDP 10,484 달러 	통화단위 元 (RMB) 	환율(U\$기준) 6.90(2020) 

- 중국은 1978년 개혁개방 이후 약 14억 명의 인구나 저임 노동력을 활용한 수출·투자 주도형 경제 정책을 통해 빠른 경제성장을 지속하여 미국에 이어 세계 2위의 경제대국으로 성장함.
- 최근 중국 정부는 공산당 창당 100주년인 2021년까지 의식주 해결의 풍요로운 사회인 '샤오캉 사회'를 실현한다는 정책목표 아래 민생 안정을 강조하며 기존의 양적 성장에서 벗어나 질적 성장을 추구해 왔음. 또한 2021년 3월 채택한 '14차 5개년 경제개발계획(2021~25년)'과 '2035 중장기 발전전략'에서는 차기 중장기 정책목표인 '현대화된 사회주의 국가' 달성을 위해 내수 위주의 '쌍순환' 경제성장과 혁신 발전을 강조하였음.
- 시진핑 주석은 2018년 개헌을 통해 국가주석 임기를 폐지하며 장기 집권 체제를 마련하였으며 성장 동력 약화, 코로나19 사태, 미국과의 갈등 심화 등에도 불구하고 강력한 정치 안정을 유지하고 있음.
- 미·중 무역분쟁 외에도 홍콩 국가보안법, 남·동중국해 영유권 분쟁, 대만과의 관계 등 다방면에서 미·중 갈등이 직접적으로 대두되며 양국의 패권 대립이 심화되고 있음.

우리나라와의 관계

국교수립 1992. 8. 24 수교 (북한과는 1949. 10. 6)

주요협정 무역협정('92), 투자보장협정('92), 과학기술협력협정('92), 이중과세방지협정('94), 형사사법공조조약('00), 민사상사사법공조조약('05), 투자증권보호협정('07), 사회보험협정('13), 기후변화협력협정('15), 영사협정('15), 자유무역협정('15)

교역규모

(단위 : 천달러)

구분	2018	2019	2020	주요품목
수출	162,125,055	136,202,533	132,565,445	반도체, 합성수지, 평판디스플레이 및 센서
수입	106,488,592	107,228,736	108,884,645	반도체, 컴퓨터, 무선통신기기

해외직접투자현황(2020년 말 누계,총투자기준) 28,039건, 75,236백만 달러

국내경제

(단위: %)

구분	2016	2017	2018	2019	2020 ^e
경제성장률	6.9	6.9	6.7	5.8	2.3
소비자물가상승률	2.0	1.6	2.1	2.9	2.4
재정수지/GDP	-3.7	-3.8	-4.7	-6.3	-11.4

자료: IMF

코로나19 충격에도 불구하고 빠른 경제활동 재개로 비교적 양호한 경제성장률 달성

- 2020년 초 코로나19 확산 이후 지역별 봉쇄, 물류 제한, 조업 중단 등의 대응 규제로 경제활동이 크게 위축되어 1분기 GDP는 성장률 통계가 발표되기 시작한 1992년 이래 처음으로 -6.0%의 역성장을 기록하였음.
- 그러나 적극적인 방역조치에 힘입어 코로나19 확진자가 조기 감소하면서 타 국가 대비 빠르게 경제활동을 재개하였으며, 대규모 경기부양책을 실시하며 2020년 2분기 이후 플러스 경제성장으로 전환하여 2020년 주요국 중 가장 양호한 2.3%의 연간 경제성장률을 기록하였음. 부문별로는 소매 판매 위축이 두드러졌으며 양호한 수출이 경제성장률을 견인한 것으로 나타남.

중국 경제지표 비교(2019~20년)

(%, 전년 동기 대비 성장률)

구분	경제성장률	산업생산	소매판매	고정자산투자	상품수출
2019년	5.8	5.7	8.0	5.4	0.5
2020년	2.3	2.8	-3.9	2.9	3.6

자료: IMF, IHS Markit

- 2021년에는 백신 공급 확대에 따른 주요국 경기 회복과 함께 수출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기업 성과 개선, 실업률 감소, 민간소비 회복과 함께 5G·고속철도·사물인터넷 등 신(新) 인프라 투자 확대 등에 힘입어 전년 대비 8.4%의 경제 성장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됨(IMF)
- 중국 정부는 2021년 설 기간 중 근로자들이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고 도시에 머무르도록 권장하는 등 코로나19 재발 방지와 민간소비 및 산업활동 진작에 노력하고 있으며, 1분기 경제성장률은 전년 동기 대비 18.3%, 전 분기 대비 0.6%를 기록하였음(중국 국가통계국).
- 중국 정부는 6월 말까지 코로나19 백신 접종률 40%를 목표로 적극적으로 접종을 장려하고 있으며, 백신 접종 확대는 소비심리 회복에 기여할 것으로 보임. 중국 위생부 통계에 따르면 6.10일 기준 백신 접종 횟수는 8억 4,500만회에 달함.

국내경제

2020년 소비자물가상승률은 에너지 수입가격 하락 영향으로 전년 대비 다소 하락

- 2020년 1분기에는 전년도부터 이어진 아프리카돼지열병으로 인한 돼지고기 공급 부족과 물류 제한이 겹치면서 식료품 가격 상승률이 20%를 넘어서기도 하였으나 2분기 이후 이러한 요인이 점차 해소되는 한편 국제유가 하락과 대내외 수요 감소가 물가하락 요인으로 작용하면서 연간 소비자물가상승률은 2.4%를 기록하여 전년 대비 상승률이 완화되었음.
- 2021년에는 아프리카돼지열병의 영향에서 벗어남에 따라 식료품 가격이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나 원유를 비롯한 주요 원자재의 국제가격 상승, 소비심리 확대가 인플레이션 상승 압력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임.

경기부양을 위한 재정적자 기조 유지

- 질적 성장을 중시하는 경제정책 기조로 교육·의료 등 민생 관련 재정지출이 증가하는 한편 2019년 4월 증치세(부가가치세)를 기존 16%에서 13%로 인하하는 등 각종 감세를 단행하면서 재정적자는 매년 증가하여 2019년 GDP 대비 -6.3%를 기록하였음. 이에 더해 2020년에는 코로나19에 대응하여 세금 환급 등 적극적인 경기부양책을 펼치면서 GDP 대비 재정적자 비중이 -11.4%까지 확대되었음.
- 2020년 중국 정부가 감면 조치한 세금 및 수수료의 총액은 2.6조 위안(약 3,786억 달러) 규모로 2021년에는 이러한 조치가 상당 부분 일몰될 것으로 보이며, 정책 목표는 기존의 중소기업 지원에서 민간 소비 활성화로 변경되는 추세임.
- 2021년에는 양호한 경제성장에 따른 세수 확대, 전년도 대비 경기부양책 축소 등으로 GDP 대비 재정적자 비중이 다소 축소될 것으로 예상됨.

대외거래

주요 대외거래 지표

(단위: 백만달러, %)

구분	2016	2017	2018	2019	2020 ^e
경 상 수 지	202,203	195,117	25,499	141,335	273,980
경상수지/GDP	1.8	1.6	0.2	1.0	1.9
상 품 수 지	488,883	475,941	395,171	425,271	533,711
상 품 수 출	1,989,519	2,216,214	2,417,443	2,399,018	2,590,386
상 품 수 입	1,500,636	1,740,272	2,022,272	1,973,747	2,056,675
외 환 보 유 액	3,010,517	3,139,949	3,072,712	3,107,924	3,216,522
총 외 채	1,416,000	1,757,958	1,982,800	2,057,300	2,203,760
총외채잔액/GDP	12.6	14.3	14.3	14.4	15.0
D.S.R.	8.2	8.1	9.1	10.2	10.0

자료: IMF, EIU

수출 확대와 해외여행 위축으로 양호한 경상수지 흑자 시현

- 중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먼저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강력한 방역조치를 취한 결과 상대적으로 빠르게 경제활동을 재개하였으며, 다른 제조업 수출 국가들의 생산성이 회복되지 못한 2020년 하반기에 큰 폭의 상품수출 증가를 기록하였음. 그에 비하여 상품수입은 전년과 유사한 수준을 기록하면서 상품수지 규모가 전년 대비 약 24% 증가하였음.
- 2020년 2월 중국의 총수출은 봉쇄조치 영향으로 전년 대비 약 40% 감소하였으나 3월부터 점차 회복되어 하반기에는 매월 전년동기 대비 증가한 수치를 기록하였음. 이는 필리핀, 태국, 말레이시아, 인도 등 다수의 제조업 수출국들이 생산성을 회복하지 못하는 동안 관련 수출이 확대된 데 따른 것으로 보임.

중국의 월별 총수출액(2019~20년)

(십억 달러)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2019	218.0	135.3	198.2	193.6	213.9	212.5	221.8	214.9	218.2	213.0	221.4	238.6
2020	211.6	80.4	184.6	199.5	206.4	212.9	236.8	234.4	238.6	236.3	267.0	281.9

자료: EIU

- 상품수지 흑자 확대에 더하여 해외여행 및 수송이 위축됨에 따라 서비스수지 적자 규모가 축소되면서 전년 대비 두 배에 가까운 2,740억 달러의 경상수지 흑자를 기록하였음.

대외거래

- 2021년에는 미국, 유럽을 중심으로 코로나19 백신 접종 확대와 함께 글로벌 수요가 회복됨에 따라 수출이 더욱 증가할 것으로 기대됨. 다만, 미·중 무역합의 1단계 이행 시한이 2021년 말까지로, 중국의 이행 가능성, 이행 점검 회의 내용, 미국의 대응 등이 주목됨.
- 중국과 미국이 2020년 1월 체결한 1단계 무역합의서에 따르면 중국은 2021년 말까지 상품 777억 달러, 농산품 320억 달러, 서비스 분야 380억 달러 등 총 2,000억 달러 규모의 미국산 제품·서비스를 2017년 대비 추가로 수입해야 함. 이에 따라 2020년 중국이 수입해야 하는 합의 대상 미국산 제품·서비스는 1,590억 달러 규모였으나 실제 수입액은 940억 달러에 그쳤으며, 2021년 중 1,933억 달러 규모의 미국산 제품·서비스를 수입해야 하는 상황임. 2021년 1~3월 중국이 1단계 무역합의 대상 품목을 수입한 액수는 263억 달러로 코로나19 영향이 감소하면서 전년동기 대비 70% 늘었지만 여전히 목표 달성에 필요한 규모의 61% 수준에 불과함¹⁾. 이에 따라 중국의 1단계 합의 이행 가능성이 다소 불확실한 상황임.

외채상환능력

외환보유액은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대외지급능력도 양호

- 2020년 말 외환보유액은 3조 2,165억 달러로 세계 최대 규모이자 월평균수입액의 13.9개월분에 달하는 수치로, 최근 5년 이상 꾸준히 3조 달러를 상회하는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또한 GDP 대비 외채 비중이 2020년 기준 15%에 불과하고 2020년 말 기준 대외순자산은 2.2조 달러(대외금융채권 8.7조 달러, 대외채무 6.6조 달러)로 GDP의 15%에 해당하는 높은 수준으로, 대외지급능력에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예상됨.
- 2020년 중국은 경상수지 흑자 증가에 힘입어 외환보유액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였음. 중국의 경제 상황은 2020년 하반기 이후 지속 개선되고 있어 당분간 급격한 외환보유액 감소나 위안화 절하 위험성은 낮은 것으로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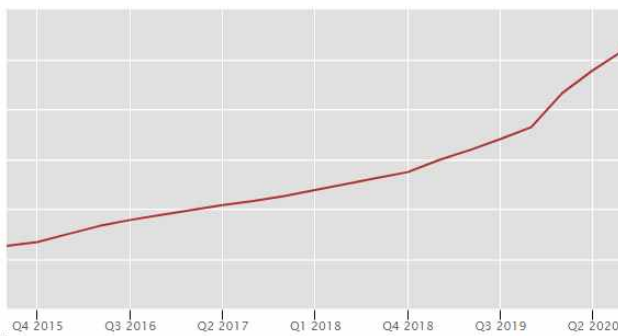
1) Peterson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s, "US-China phase one tracher: China's purchases of US goods", 27 April 2021.

구조적취약성

정부와 기업 부문의 부채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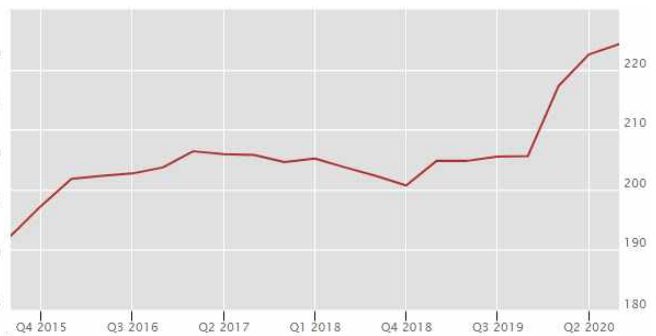
- 국제결제은행(BIS) 자료에 따르면 2020년 3분기 말 중국 정부의 GDP 대비 부채 비중은 61%(2015년말 42%), 기업(금융 부문 제외)의 부채 비중은 224%(2015년말 3분기말 192%)로 최근 5년간 크게 증가하였다. 이는 중국 정부가 수년간 경제성장을 유지하기 위해 다수의 지역개발 및 산업발전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면서 지방정부의 채권 발행을 통한 투자자금 조달, 기업들의 투자 용도 차입이 확대된 결과이며 2020년에는 코로나19 영향으로 부채 증가 속도가 더욱 높아졌다. 특히 국유기업, 지방정부의 채무 증가는 중앙정부에 우발채무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우려됨.
- 2019년 7월 국가발전개혁위원회와 인민은행 등은 '기업 레버리지 비율 축소 업무요점'을 발표하여 기업들에 대한 전략적 구조조정을 실시하고 지속가능성이 없는 좀비기업의 채무를 조속히 청산·처분할 것을 명시하였다. 이처럼 중국 정부는 과도한 부채 문제의 개선을 위해 국유기업을 포함하여 부실기업의 디폴트를 용인하는 입장으로 선회하였으며, 2020년 회사채 디폴트 규모는 전년 대비 14% 증가하여 역대 최대 규모인 298억 달러를 기록하였다. 또한 2021년 1분기 디폴트 규모는 151억 달러로 급격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음.
- 특히 2020년 10~11월 주요 국유기업 3개사가 연달아 회사채 상환에 실패하여 시장에 큰 충격을 주었다. 이들은 독일 BMW의 협력 관계사인 화천자동차그룹, 국유 석탄 채굴기업인 용청석탄전기, 중국 반도체 굴기의 선봉기업으로 꼽히던 칭화유니그룹으로 모두 상당한 규모와 시장 지위를 갖춘 국유기업임에도 불구하고 중국 정부는 디폴트 사태를 방치하였다.

GDP 대비 정부 부채 비중(%)



자료: 국제결제은행(BIS)

GDP 대비 기업(금융 부문 제외) 부채 비중(%)



자료: 국제결제은행(BIS)

- 중국 경제의 잠재적 불안 요인으로 거론되는 지방정부 부채 역시 2020년 말 기준 25조 6,600억 위안(약 4,625조 원)으로 GDP 대비 비중이 전년 대비 4% 포인트 증가했다. 중국 지방정부는 인프라 투자 등 공공사업 재원을 확보하는 수단으로 채권 발행을 활용해 왔으며, 중앙정부는 코로나19 이후 재정건전성이 악화된 상황에서 지방정부 부채 관리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음.
- 중국 본토의 31개 성(省)급 행정구역 중 구이저우성, 네이멍구자치구, 랴오닝성, 닝샤자치구, 텐진직할시, 칭하이성, 윈난성, 지린성, 후난성 8개의 지역 GDP 대비 채무 비율이 이미 100%를 초과한 상태로, 만성적으로 예산 수입보다 지출이 많아 추가로 채권을 발행하여 빚을 임시 상환하거나 중앙정부의 지원을 받아야 하는 상황임.

구조적취약성

은행 부문의 자산건전성 편향 및 그림자 금융과의 연계로 중소기업 부실화 우려

- 중국의 은행업 부문은 1개 중앙은행, 3개 정책은행, 6개 국유상업은행, 12개 주식제 상업은행 및 특정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다수의 도시상업은행, 농촌상업은행(이하 지방은행)으로 구성되어 있음. 국유상업은행 및 일부 대형 주식제 상업은행을 중심으로 대규모 우량 여신자산이 분포하여, 이들은 리스크는 낮으면서 수익성이 우수함. 이에 반해 중소 지방은행은 전통적 예대 고객기반이 취약하여 은행 간 채권 발행 등을 통해 주로 대형 우량은행에서 자금을 조달하며, 그 중 상당 부분을 고위험·고수익형 그림자 금융 부문*에 투입하여 그림자 금융과 중소기업, 대형은행이 모두 연계되어 있음.
- * 그림자 금융은 정부 규제를 받지 않는 비은행권 금융으로, 중국 은행들의 투자 대상 중 민영 중소기업 발행 비표준화 채권 매입, 부동산 개발 PF 프로젝트, 지방은행 주도 중장기 인프라 프로젝트 등이 이에 해당함.
- 2020년 12월 중국 은행보험감독관리위원회(은보감회) 발표에 따르면 2019년 기준 중국의 그림자 금융 규모는 84.8조 위안으로 중국 GDP의 약 86%에 해당함. 중국의 그림자 금융은 그 절대규모보다 영업 구조상 은행업과 그림자 금융이 연계되어 있다는 점이 문제시되며, 은보감회는 그림자 금융에 대한 지속적인 감독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음. 한편 중국 정부는 2017년부터 적극적인 부채 감축을 위해 부실기업의 부도를 용인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으며, 이와 함께 그림자 금융 규제가 강화되면서 부동산 개발사업 중단, 민영기업 발행 채권 디폴트 등으로 중소기업의 자금난이 심화되었음.
- 2019년 5월 내몽골 기반 도시상업은행인 포상은행이 대주주 불법행위와 자산 부실화로 정부 관리 체제에 편입되면서 지방 중소기업의 부실화 가능성이 부각되었음.

위안화 환율은 양호한 경제지표와 미 달러화 약세 영향으로 강세

- 2020년 상반기 미 달러당 위안화 환율은 코로나19 팬데믹 충격에 따른 안전자산 선호와 홍콩 국가 보안법 입법에 따른 미·중 갈등 심화 영향으로 약세를 보이며 5.26일 기준환율이 달러당 7.1293위안으로 2008년 금융 위기 이후 12년 3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였음. 그러나 이후 중국의 빠른 경제 활동 재개와 성장률 회복, 수출 호조 등의 영향으로 꾸준히 강세를 나타내 2021년 5월 28일 인민은행이 발표한 기준환율은 달러당 6.3858위안으로 2018년 6월 이후 처음으로 6.4 아래로 떨어졌음.
- 중국 인민은행은 위안화 강세에도 외환시장 개입을 자제해 왔으나, 위안화 절상이 지속되자 5월 31일 외화예금 지급준비율을 종전 5%에서 7%로 14년 만에 전격 인상하였음. 당초 인민은행은 수입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물가 상승을 우려하여 환율 불개입을 시사하였으나 위안화 상승세가 가팔라지자 수출 가격경쟁력 방어, 자산시장 과열 방지 등을 위해 조치를 취한 것으로 보임. 미 달러화 약세, 중국의 낙관적 경제 전망 및 외국인 자본 유입 등 위안화 절상 요인이 여전한 가운데 인민은행의 조치도 현재로서는 간접적 방식에 그쳐 당분간 위안화 강세가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함.

성장잠재력

전방위적 개방정책을 통한 외국인직접투자(FDI) 유치

- 중국 정부는 예측 가능하고 투명한 투자환경 조성 노력의 일환으로 기존의 외자3법(중외합자경영기업법, 중외합작경영기업법, 외자기업법)을 통합하여 새로운 외국인투자법 체계를 구축한 외상투자법을 도입,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하였음.
- 이 법에서는 미·중 무역분쟁에서 주요 쟁점 사항이었던 지적재산권 보호 및 강제 기술이전 금지 등을 규정하고, 네거티브 리스트 이외의 투자항목에 대해서는 외국 기업과 중국 기업을 동등한 조건과 절차로 심사할 것을 명시하여 외국인투자자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는 등 중국 정부의 개혁개방 정책 가속화 의지가 반영되어 있음.
- 또한 2020년 7월 새로운 외국인투자 네거티브 리스트를 발표하여 금융 분야 중 증권사, 증권투자펀드 관리자 등에 대한 외자 지분 제한을 철폐하는 등 서비스업, 제조업, 농업 부문에 걸쳐 투자규제 항목을 40개에서 33개로 축소하였음. 중국은 전방위적으로 시장 개방을 확대하고 있으며, 중국으로의 FDI 유입액은 2020년 기준 약 1,630억 달러로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전년 대비 4% 증가하여 미국을 제치고 세계 1위를 기록하였음(UNCTAD).
- 중국 정부는 대외개방 확대 조치의 일환으로 리스트에 명시된 외국인투자 제한 및 금지 분야 외에는 전면 개방한다는 의미로 2017년 6월 처음으로 외국인투자 네거티브 리스트를 발표하였으며, 이후 매년 투자규제 항목을 축소*하여 새로이 발표하였음.
* ('17.6월) 63개 → ('18.6월) 48개 → ('19.6월) 40개 → ('20.6월) 33개
- 2021년 3월 중국 상무부 발표에 따르면 1~2월 중국으로 유입된 외자 규모는 약 1,768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31.5% 증가하였음. 당국은 2021년에도 네거티브 리스트를 더욱 축소하고 특히 서비스업 개방을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음.
- 단, 대체적으로 투자 개방을 확대하는 와중에도 안보 이슈에는 민감하여 2021년 1월부터 모든 외국인 투자에 대하여 국가안보영향평가를 의무화하였음.

지속적인 경제성장에 힘입어 내수시장 구매력 점차 확대

- 중국의 2020년 인구 추정치는 약 14억 명으로 세계 1위, GDP 규모는 14조 7,228억 달러로 세계 2위이며 1인당 GDP는 10,484달러임. 1978년 개혁개방 이후 막대한 저임 노동력이 중국을 제조업 허브로 성장시킨 결과 중국은 구매력 있는 대규모 중산층을 보유하게 되었으며, 내수시장 발달을 통한 추가적인 성장동력 확보가 기대됨.
- 2020년 5월 시진핑 주석은 국내 대순환 중심의 쌍순환 전략을 제시하며 완전한 내수 시스템을 구축하여 국내 유통이 경제발전의 주도적인 역할을 하도록 하겠다고 밝혔음. 중국 경제는 그간 외국인 투자와 수출 중심으로 성장해 왔으나 내수 시스템 육성, 고품질 상품 및 서비스 공급역량 강화 등 내수 시장 육성 전략과 중산층 확대가 맞물려 내수 중심 경제로의 전환이 예상됨.

정책성과

코로나19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민생안정 목표 달성

- 미·중 무역갈등과 코로나19 확산 등 대내외 변동성이 심화된 가운데 개최된 2020년 5월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에서 리커창 총리는 이례적으로 구체적인 성장률 목표를 제시하지 않고 취업 및 민생안정 정책을 최우선으로 추진한다고 발표하였음.
- 정부는 성장률 목표 대신 6대 안정(취업, 금융, 무역, 외자, 투자, 시장전망 안정) 및 6대 보장(취업, 민생, 시장 주체, 식량·에너지 안보, 산업공급망 안정, 기층조직 운영 보장) 달성을 강조하였음. 각급 정부 역시 기업 앞 무이자 재대출 등 신용대출 자금 지원, 주요 업종 및 소규모 납세자 앞 감세정책 실시, 기업 판매 활성화를 위한 영세 전자상거래 기업 지원 등 기업과 경제 안정화를 통한 취업과 민생안정을 추진하였음.
- 2021년 3월 전인대에서 발표한 정부 업무보고에 따르면, 2020년 중 도시 신규 취업자, 도시 실업률, 가처분소득 증가율 등 취업과 민생안정 관련한 지표들이 목표를 상회하는 수치를 달성한 것으로 나타남.

정부 업무보고 기준 민생안정 목표 및 달성 내역

구분	2019년		2020년	
	목표	달성	목표	달성
도시 신규 취업자	1,100만 명 이상	1,352만 명	900만 명 이상	1,186만 명
도시 실업률	5.5%	5.2%	6% 이내	5.2%
가처분소득 증가율	경제발전수준	5.8%	경제발전수준	4.7%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상해사무소

경기 부양과 질적 성장을 위한 다양한 정책 추진

- 중국 정부는 공산당 창당 100주년(2021년)을 앞두고 2020년 말까지 전면적인 샤오캉 사회(모두가 넉넉하게 잘 사는 사회)를 건설한다는 목표 아래 재정정책을 통한 적극적인 경기 부양을 도모해왔음.
- 2018년 10월 개인소득세 징수 기준을 월 3,500위안에서 5,000위안으로 상향 조정한 데 이어 자녀교육, 평생교육, 중대질환 치료 등 6개 특별공제항목을 포함한 신규 개인소득세법을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조업 분야 증치세(부가가치세)율을 16%에서 13%로, 교통·건설업 분야는 현행 10%에서 9%로 각각 인하하는 등 큰 폭의 감세를 시행하였음.
- 2020년에는 코로나19 이후 경기충격 대응을 위하여 지방정부 특별채권을 확대 발행하여 소비 촉진, 인프라 건설, 공공시설 서비스 능력 제고 등에 사용토록 하였으며 기업의 각종 보험료 및 수수료 감면, 중소기업 임대료 감면, 수출세 환급률 인상 등 다양한 재정정책을 시행하였음.
- 2021년 4월 중국 국무원은 탈빈곤 성과를 담은 백서를 내고 사실상 샤오캉 사회를 달성했다고 선언하였음. 지난 20년(2001~2020)간 중국의 GDP는 1조 3,337억 달러에서 15조 2,222억 달러로 11배 이상 성장하였으며 이 기간 중 영양부족인구 비율('01)10.6%→('18)2.5%), 식수 접근율('01)80.7%→('17)92.8%), 빈곤인구 비율('01)49.8%→('19)0.6%) 등²⁾ 생활 수준 관련 지표들이 명시적으로 개선되었음.

2) data.worldbank.org: Prevalence of undernourishment, People using at least basic drinking water services, Poverty headcount ratio at national poverty lines

정치안정

시진핑 주석의 1인 독재체제 공고화

- 2018년 3월 집권 2기를 시작한 시진핑 주석은 헌법 개정을 통해 주석직 연임 제한을 폐지하고, 공산당 중심의 통일된 집권체제를 구축하여 실질적인 1인 독재체제를 유지함. 미·중 무역분쟁 등 국제관계 갈등과 성장잠재력 둔화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시진핑 주석의 리더십은 안정적인 것으로 평가됨.
- 코로나19 확산 초기에는 대응 미숙과 정보 비공개에 대한 비난 여론이 있었으나, 강력한 방역 및 경기 부양책을 시행하고 다른 국가들에 비해 조기에 확진자 감소에 성공하면서 코로나19를 극복한 영웅적 면모로 포장되었음. 시진핑 주석은 2021년 신년사에서 중국이 코로나19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코로나19 방역과 통제, 경제·사회 발전에서 중요한 성과를 거두었다고 강조하였음.

사회안정

정부의 강력한 언론 통제

- 중국은 세계경제포럼의 2019년 '글로벌 경쟁력 지수' 항목 중 언론의 자유 부문에서 141개국 중 140위, 국경없는 기자회가 2021년 4월 발표한 '언론자유지수 2021'에서 180개국 중 177위를 기록할 정도로 자유로운 언론 보도가 제한되고 정부에 의한 강력한 언론 통제가 이뤄지고 있음.
- 중국 정부는 인터넷 뉴스 정보를 관리하는 '인터넷 정보 콘텐츠 생태 관리 규정'을 제정하여 2020년 3월 1일부터 시행 중으로, 이 규정은 제작·배포를 엄금하는 11가지 악성 콘텐츠*를 명시함. 정부는 뉴스 공급자가 코로나19 등의 재난에 대한 부당한 논평과 경제상황에 대한 부정적 보도를 억제해야 하며, 사용자들의 유언비어 날조 행위에는 강력한 민·형사상 처벌을 가하겠다고 밝힘.
- * 헌법 위배, 국가안보 훼손, 국가 정권 전복, 국가통일 파괴, 국가 이익 훼손, 영웅 열사 정신 왜곡, 테러리즘과 극단주의 선동, 민족단결 파괴, 국가 종교정책 위반, 유언비어 유포와 경제 및 사회질서 교란, 음란·외설·도박·살해 등의 범죄 유포, 명예 훼손, 법률에서 금지된 기타 내용을 포함한 정보 등
- 한편, 홍콩에서는 2021년 3월 정부 관리가 공영방송 RTHK의 신임 방송국장으로 임명된 후 간부들이 잇달아 사임하였으며, 방영된 지 1년 이상된 콘텐츠들을 데이터베이스에서 삭제하기도 하였음. 또한 중국 기업 및 재계 인물이 봉황TV, 성도신문 등 홍콩 언론사 지분을 인수하면서 홍콩 언론의 독립성 침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며, 최근에는 반정부 성향 언론사인 에포크타임스에 고한이 습격해 인쇄기를 부수고 이후 소속 기자가 습격을 받는 사건도 있었음.

사회안정

홍콩 국가보안법 제정 등 홍콩에 대한 통제 강화

- 2019년 3월 말 홍콩에서 '범죄인 인도법'에 반대하며 촉발된 시위는 중국의 내정간섭에 대한 불만으로 폭발적으로 확대, 지속되다가 2020년 초부터 코로나19 방역조치 영향으로 시위 규모와 빈도가 감소하였음. 중국 본토에서는 홍콩의 시위·소요 사태를 엄중히 인식하여 홍콩 국가보안법 직접 입법을 추진하여 2020년 6월 말 이를 발효하였으며, 홍콩 시민들의 반정부 시위 참여가 사실상 불가능해짐. 이 과정에서 홍콩의 자치권을 침해하고 민주주의를 탄압하는 조치라며 미국, 영국을 중심으로 국제사회의 비난과 갈등에 직면하였음.
- 홍콩 국가보안법은 외국 세력과의 결탁, 국가 분열, 국가정권 전복, 테러행위 등 4가지 행위에 대해서 최고 무기징역에 처하고, 경미한 범죄행위도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도록 함. 이에 따라 홍콩의 독립을 주장하는 모든 행위는 처벌 대상이 되며, 홍콩 영주권자가 아닌 사람이 홍콩 외 지역에서 이 법을 위반하는 경우도 제재 대상에 포함되도록 함. 사실상 첫 시행일인 7월 1일에 300명 이상의 홍콩 시민이 동 법 위반 혐의로 체포되었음.
- 또한 중국 정부는 2021년 3월 전인대에서 홍콩 선거제 개편안 초안을 의결하였으며 5월 27일 홍콩 입법회에서 최종 통과되었음. 개편안은 공직선거 출마 후보자 자격 심사 위원회 설치, 행정장관 선거 인단에 친중 세력 확대, 입법회 선출직 축소 등 중국 정부의 영향력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신용영향점수는 개도국 중 상위권에 속하는 것으로 평가

- 2021년 4월 Moody's는 ESG 요소가 중국의 정부채 신용등급에 미치는 영향이 단기적으로는 제한적이나, 장기적으로는 부정적일 수 있다고 보고 ESG 신용영향점수(ESG Credit Impact Score)를 3등급(Moderately Negative)으로 평가하였음.
- * Moody's는 ESG 등급을 1(긍정적)~5(매우 부정적)의 5단계로 구분하고 있음. 2021. 1월 Moody's 발표자료에 따르면 동사의 평가대상 144개국은 1등급 11개국(우리나라 등), 2등급 30개국(미국 등), 3등급 38개국(일본·중국 등), 4등급 45개국(베트남·인도 등), 5등급 20개국(이라크·베네수엘라 등)으로 분류됨. 특히, 선진국에 비해 지배구조(Governance)가 취약한 개도국의 경우 전체 107개국 중 1등급 국가는 없으며 42개국이 2·3등급, 65개국이 4·5등급에 분포되어 ESG 영향이 신용등급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남.
- **(환경)** 급격한 도시화와 1인당 물 사용량 증가, 기후 변동성 확대로 인한 수자원 관리의 어려움이 물 부족 위험을 증가시키고 있음. 물 확보와 공기 오염 관련한 정부 정책이 아직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어 환경(Environmental) 영향은 다소 부정적(3등급)으로 평가됨.
- **(사회)** 중국은 그간 꾸준한 인구 증가가 경제성장과 공공재정 확보에 기여해 왔으나, 노동연령 인구가 감소하기 시작하면서 성장잠재력 저하가 우려됨. 이는 소득수준의 지속적인 향상이라는 정책 목표 달성을 어렵게 하고 사회 갈등을 증폭시킬 수 있어 사회(Social) 영향은 다소 부정적(3등급)으로 평가됨.
- **(지배구조)** 지배구조에는 특기할 만한 위험 요소가 없이 안정적인 편으로, 건전하고 관리 가능한 정부 재정을 바탕으로 환경 및 사회 위험에 대처할 수 있는 탄력성을 갖추어 지배구조(Governance) 영향은 다소 긍정적(2등급)으로 평가됨.

국제관계

미국과 무역, 외교, 금융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제재와 갈등 지속

- 미국과 중국은 무역분쟁, 기업 제재 등 경제 분야 뿐 아니라 홍콩 자치권, 신장위구르자치구 인권, 남중국해 영유권, 대만과의 관계 등 다방면에서 갈등을 지속하고 있음.
- 2020년 1월 미·중 1단계 무역합의 체결로 2018년 3월 이후 22개월에 걸쳐 지속된 양국간 무역분쟁의 점차적인 해소가 기대됨. 그러나 향후 2단계 협의 과정에서 중국의 보조금 지급 등 보다 민감한 이슈가 남아 있으며 코로나19 사태 영향으로 중국의 1단계 합의사항 이행 가능성이 불확실한 점과 미국이 중국 제품 일부(연간 2,500억 달러 규모)에 부과한 25%의 고율 관세를 유지하고 있는 점은 무역갈등 관련 긴장을 지속시키는 요소임. 다만 양국은 수 차례 1단계 합의 이행 의사를 밝힌 바 있음.
- 양국은 1단계 무역합의 체결시 합의 이행 상황을 6개월마다 점검하도록 하였으나 2020년 8월 회의 이후 평가일 현재까지 이행 점검 회의가 개최되지 않았음. 2021년 5월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는 조만간 중국과의 만남을 기대한다고 발언하였으며 중국 상무부 대변인 역시 이에 긍정적으로 호응하였음. 미 바이든 정부 출범 이후 첫 미·중 무역갈등 관련 고위급 회담 성사시 그 내용이 주목됨.
- 2020년 5월 미 상무부는 안보 위협을 이유로 미국의 기술이나 장비를 사용하는 외국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업체가 화웨이에 제품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미국 정부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제재안을 발표하였음. 이는 화웨이가 외국 기업으로부터 반도체 부품을 공급받는 것을 사실상 불가능하게 하는 조치임.
- 2020년 6월 홍콩 국가보안법이 발효되자 미국은 이러한 조치는 홍콩의 자치권을 상실시킨 것이라며 강도 높은 비난과 제재 조치를 연달아 발표하였으며, 7월 14일 트럼프 대통령은 홍콩의 특별지위를 박탈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하였음. 중국은 홍콩 국가보안법 입법은 내정 문제라는 입장임.
- 동 행정명령은 중국 중앙정부의 일방적인 홍콩 국가보안법 시행으로 홍콩 반환협정이 보장하는 홍콩의 자치가 근본적으로 훼손된 것을 근거로 하여, 미국의 국가안보, 외교정책, 경제적 이익과 관련한 홍콩에 대한 차별적 우대*를 중단 및 폐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함.
- * 미국은 1992년 제정된 미-홍콩 정책법(US-Hong Kong Policy Act)에 따라 무역, 관세, 금융, 비자 발급 등에서 홍콩에 대해 중국 본토와는 다른 특별지위를 부여해 왔음.
- 2020년 7월 21일 미국 정부는 휴스턴 주재 중국 총영사관이 체제전복적인 행위에 개입해 왔다고 휴스턴 총영사관을 72시간 내 폐쇄하도록 조치하였음. 중국 정부는 미국 정부의 휴스턴 총영사관 폐쇄 조치가 국제관계와 국제법을 심각하게 위반하였다고 강력히 반발하였으며, 7월 24일 청두 주재 미국 총영사관에 마찬가지로 72시간 내로 폐쇄하도록 요구하는 등 외교적 갈등이 심화되었음.
- 2020년 12월 트럼프 대통령은 미 상장기업 회계감사위원회의 감사에 3년 연속 응하지 않는 모든 기업의 미국 증시 상장 금지(기존 상장기업은 거래 중지)되며, 이와는 별도로 외국 정부가 소유했거나 통제하지 않는다는 점을 증명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외국기업책임법'에 서명하였으며, 2021년 3월 미 증권위원회가 동 법안을 채택함에 따라 중국 기업의 미국 금융시장 접근이 제한될 것으로 예상됨.
- 중국 증권법은 정부의 승인 없이는 기업이 자의적으로 외국 당국에 회계자료를 제출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어, 동 법안은 사실상 중국 기업의 미국 증시 상장을 금지시키는 역할을 함.

국제관계

동남아시아 국가들과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 지속, 이와 관련하여 미국과도 갈등 발생

- 중국은 베트남, 필리핀, 말레이시아, 타이완, 브루나이와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을 지속하고 있음. 각국이 주장하는 영유권의 범위가 중첩되고 (중국은 사실상 남중국해 전체의 영유권을 주장) 남중국해에 매장된 원유·가스의 발굴 등 경제적 이익이 관련되어 협상을 통한 분쟁 해결이 어려운 상황임.
- 또한 중국의 남중국해 도서 군사기지화에 미국이 우려를 표명하며 '항행의 자유'를 내세워 주기적으로 해당 해역에 자국 군함을 진입시키고, 중국은 이를 주권침해 행위로 비난하며 군사력을 동원한 대응에 나서는 등 단순한 국가 간 영해 분쟁을 넘어 동아시아 지역에서의 경제적 이권 및 패권 다툼의 양상을 보이고 있음.

대만에 대해서는 '하나의 중국' 원칙으로 압박 계속, 갈등 심화

- 중국은 홍콩·마카오·대만 지역에 대하여 '하나의 중국' 원칙을 고수하면서 대만을 독립국가로 인정하지 않고 외교적으로 고립시키는 등 지속적인 압박을 가하고 있음.
- 대만에서는 홍콩 시위 사태를 겪으며 중국에 대한 반감이 강화되어 2020년 1월 치러진 총통 선거에서 주권 수호를 내세운 차이잉원 총통이 높은 지지율로 재선에 성공하였음. 중국은 '대만의 독립행위를 불허한다'는 공식 반응을 내놓았으며, 중국 군용기가 방공식별구역을 상습적으로 침범하는 등 군사적 위협행위가 지속되고 있음. 2021년 들어서는 중남미 지역에서 엘살바도르, 코스타리카 등 대만과 국교를 단절한 국가 앞으로 코로나19 백신을 우선 공급하며 주변국에 단교를 압박하고 있음.
- 한편 미국은 바이든 정부 출범 이후 비공식 대표단을 대만에 파견하고 대만 앞 무기 수출 계약을 체결하는 등 기존의 전략적 모호성*을 다소 벗어난 행보를 보이고 있으며, 이에 중국은 주권과 영토 보전을 위해 무력 전쟁까지 불사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임.

* 미국은 공식적으로 대만을 독립 국가로 인정하지 않고 '하나의 중국' 원칙에 동의하는 한편, 대만 관계법을 제정하며 대만과 비공식적인 관계를 긴밀히 유지하는 전략적 모호성을 취해 왔음.

중앙아시아 국가들과 우호관계 강화

- 중국은 지난 5월 카자흐스탄, 키르기즈,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우즈베키스탄 등 중앙아시아 5개국 외교 장관과 중국 시안에서 대면 회의를 개최하였음.
-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다자간 대면 회의를 마련한 것은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서방과의 갈등이 지속되는 가운데 중국이 자국에 우호적인 중앙아시아 국가들을 대상으로 관계를 강화하고 중앙아시아 국가들이 보유한 석유, 천연가스, 금, 우라늄 등 주요 천연자원을 확보하려는 행보로 해석됨.
- 중국수출입은행은 타지키스탄과 키르기즈의 최대 단일채권자로 이미 일대일로 프로젝트를 통해 이 지역에서 자원 개발을 주도하고 있음. 또한 관계가 악화되고 있는 호주에 대한 에너지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천연가스를 보유한 투르크메니스탄과의 관계 강화에 특히 힘을 쏟고 있음.

외채상환태도

풍부한 외환보유액을 바탕으로 양호한 외채상환태도 유지

- 중국은 단기외채잔액(2020년 말 1조 3천억 달러, OECD)의 2.5배에 달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외환보유액(2020년 말 3조 2,165억 달러)을 유지하고 있으며, 외채원리금상환비율(D.S.R.)도 10.0%의 낮은 수준으로 원리금 상환부담이 크지 않은 편임.
- 한편, 2020년 말 기준 중국에 대한 OECD 회원국 ECA의 채무 잔액은 단기 128억 달러, 중장기 125억 달러 등 총 254억 달러이며, 이중 연체금은 약 36백만 달러(0.14%)로 채무상환태도가 양호함.

국제시장평가

주요 기관별 평가등급

평가기관	최근 평가등급	종전 평가등급
OECD	2등급(2020.06)	2등급(2019.06)
Moody's	A1 (2020.09)	A1 (2019.07)
Fitch	A+ (2020.07)	A+ (2019.11)

최근 국제신인도는 변동 없이 양호한 수준

- 2017년 Moody's는 잠재성장률 하락, 부채 증가세 지속 등을 이유로 중국의 신용등급을 A1으로 하향 조정한 바 있음. 이후 평가일 현재까지 OECD 및 주요 국제신용평가사의 등급은 변동 없이 양호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 계속되는 성장률 둔화, 높은 공적채무 비율* 등을 감안하여 국제신인도 변화를 지속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음.

* 공적채무/GDP(OECD) : 46.1%('17) → 49.1%('18) → 54.4%('19) → 64.9%('20°)

- 2020년 초 중국 경제는 코로나19와 그에 따른 방역조치 등의 영향으로 급속히 침체되었으나 이후 적극적인 경기부양책, 과감한 방역조치 등에 힘입어 조기에 경제활동을 재개하여 2020년 2.3%의 성장을 시현, 주요국 중 가장 양호한 경제 성과를 보였음. 2021년에도 글로벌 경기 개선에 따른 대외 수요 회복에 힘입어 수출을 중심으로 양호한 경제 성장이 예상됨.
- 미국에 이어 세계 2위의 경제대국으로 성장한 중국은 2020년 코로나19 사태와 미·중 갈등 심화를 계기로 내수를 중시하는 '쌍순환'을 새로운 성장 패러다임으로 수립하였으며, 단기적으로는 민생 안정과 코로나19의 재유행 방지에 중점을 둔 사회·경제 정책을 강조하고 있음.
- 공산당 1당 독재체제로 정치 안정성은 높은 편이나 언론 통제, 인권 탄압 등으로 국제사회의 우려와 비난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또한 홍콩 통제 강화를 둘러싼 갈등, 미국과의 패권 다툼, 주변국과의 영토 분쟁 등 다양한 국내외 문제가 상존하나 높은 수준의 사회 안정성을 유지하고 있음.
- GDP 대비 외채 비중은 2020년 기준 15%에 불과하고 외채원리금상환비율(D.S.R.)도 10%로 낮은 수준이며 경상수지 흑자 지속, 세계 최대의 외환보유액 유지 등으로 대외지급능력에 별다른 문제는 없음.